NH투자증권

은행산업

가계부채 관리 강화의 은행주 영향

Analyst 정준섭 02)768-7835, junsup@nhqv.com

금융당국,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

6/27일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. 주요 내용은 ① **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목표 하반기 50% 감축,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25% 감축**, ② 수도권 주담대 총액 6억원,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1억원으로 한도 제한, ③ 수도권 대출만기 30년으로 제한, ④ 수도권 LTV 강화, 정책대출 한도 축소, 전세보증비율 강화 등. 금융당국은 발표 내용 시행 전 수요 쏠림을 막기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는 즉각 시행 결정

동 정책 시행에 따라 은행권 가계대출 성장폭은 이전보다 축소될 예정. 정부는 이번 정책에 앞서 은행권 주담대에 대해 자본비율 규제 강화를 검토한 바 있으며, 여기에 이번 조치까지 더해졌기 때문. 정부 정책에 따라 하반기 총량이 50%(연간 기준 약 25%), 정책대출 연간 공급계획이 25% 감소하면서, **시중은행 4사(국민, 신한, 하나, 우리)의 금년 연간 가계대출 성장률은 기존 예상(3~5%) 대비 0.5~1 %p 축소** 예상

시중 은행주 주가에는 부담이 되지 않을 전망

정부의 규제 강화 조치는 강제로 은행권 가계대출 성장을 제한하는 만큼 주가 호재로 보기 어렵지만, **시중 은행주에는 딱히 부담스러운 요인이 아님**. ① 가계대출 성장 여력 축소는 기업대출 증가로 해소 가능. 시중은행은 대출자산의 가계:기업 비중이 1:1에 가까운 만큼, 연간 대출성장 목표 달성에 큰 어려움은 없음. ② 낮은 자산성장이 주주가치 측면에서는 오히려 유리한 측면도 있음. 시중 금융지주 주가는 자산 성장을 통한 이익 증가보다 **적정 자본비율을 초과하는 자본의 주주 환원이 더 중요**한데, 자본비율(CET1 비율 = 보통주자본 / RWA)과 대출성장(RWA증가)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

반면 **높은 성장을 지향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게는 상대적으로 부담**스러운 정책. 당사 커버리지인 카카오뱅크는 대출자산 대부분이 가계대출('25년 1분기 기준 95%)로 구성되어 있어, 가계대출 제한은 전체 성장 여력에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음. ① 규제 대상이 아닌 비수도권 대출 성장, 가계대출을 대체할 소상공인 대출 증가와 ② 비이자이익의 플랫폼, 수수료 수익 증대, ③ 스테이블코인 등 시장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관건이 될 전망

종목 투자등급(Stock Ratings) 및 투자등급 분포 고지

1. 투자등급(Ratings): 목표주가 제시일 현재가 기준으로 향후 12개월간 종목의 목표수익률에 따라
   - Buy : 15% 초과
   - Hold : -15% ~ 15%
   - Sell : -15% 미만

2. 당사의 한국 내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의견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. (2025년 3월 31일 기준)
   - 투자의견 분포

Buy	Hold	Sell
86.9%	13.1%	0.0%

- 당사의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의견 분포는 매 분기말 기준으로 공표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'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'의 발행주식 등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'KB금융, 신한지주, 하나금융지주' 을(를)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회사 및 LP(유동성공급자)임을 알려드립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 사항

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의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분석한 결과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해 작성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.